어둡고 긴 5년을 보내며

2008년 한 해 동안 어떤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했는데, 12월 9일에 쓴 마지막 글의 제목이 “어둡고 긴 한 해를 보내며”였다. 그 한 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 정부의 첫 해를 뜻하는 것이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저런 일로 많은 물의를 빚어내더니, 출범하자마자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미국과의 쇄고기협정을 밀어붙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쇄고기협정이 촉발한 촛불시위를 전후해 보인 대통령의 태도는 ‘불통(不通) 정권’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내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환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은 날로 더 팍팍해져 가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글에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토로했다. 불행히도 내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고, 그 결과 지금 “어둡고 긴 5년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실로 어둡고 긴 세월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부조직부터 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온통 해집고, 뒤집어 놓았지만 나아진 건 아무 것도 없고 쓸모없이 혼란만 부추겼을 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지난 5년에 대해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바로 설익은 신자유주의 이념이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바꿔 보겠노라고 팔 걷고 나섰지만, 그것은 애당초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이었다. 다른 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실험이 속속 실패로 드러나고 있던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만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탄탄한 실증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맹신의 차원에서 밀어붙인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리 만무한 일이었다.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지만, 설익은 신자유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만 만들어졌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런 위험성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 일간지에 연재한 칼럼의 첫 번째 글 제목이 바로 “선부른 실험 삼가야 한다”였던 것은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글에서 나는 선부른 실험이 더 큰 비효율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러나 내가 잡은 정권이니 내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오만으로 가득 찬 그들이 내 경고에 귀 기울일 리 없었고, 결국 내가 걱정하는 바로 그 길로 거침없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감세정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경제를 다시 살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경제의 활력이 더 커졌다는 뚜렷한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났던 재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양극화가 한층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된 것 말고는 달리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 않다. 철저한 검증 없이 선부르게 도입된 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이렇다 할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왜 갑자기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이명박 정부가 회심의 역작으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가진 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사고 시스템 그 자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뿐더러, 자사고를 통한 경쟁구도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일반고에 자제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누구를 잡고 물어 보든, 자사고 제도가 도입된 후 일반고 교육의 질에 눈에 띄는 개선이 일어났다는 대답은 듣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제도가 도입된 후 사교육의 필요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역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종전의 학과 위주 사교육의 필요성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스펙 쌓기를 위한 준비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펙 쌓기란 그 본질상 가진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평등화 효과는 점차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의 더 큰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라 별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평가 결과의 사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곧 시행될 선택형 수능제도 역시 입시제도를 둘러싼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적인 단순 논리에 따르면 선택가능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법이다.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탁상공론과 판이하게 다르다. A형 수능을 고를지 아니면 B형 수능을 고를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대학 당국이 두 가지 수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느낄 혼란의 정도는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입시제도 그 자체가 복잡하기 짝이 없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터에 수능제도와 관련된 복잡성까지 더해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복잡한 제도는 가진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든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로는 그 복잡한 제도를 어떻게 헤쳐갈지 막막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경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컨설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제도, 입학사정관제도, 선택형 수능제도 등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모든 제도들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제도가 갖는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도입한 것은 매우 졸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별 긍정적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술한 부작용만 가져왔다. 이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결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지난 5년이 우리에게 유난히 어둡고 길게 느껴진 데는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질 쳤을 뿐 아니라, 원칙이 실종되고,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반이 무너져 내린 데서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하의 5년 동안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야 했다.

지난 5년 동안 민간인 사찰,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 등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술한

일들이 일어났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사회의 소금이어야 할 언론은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로 전락해 사회비판의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공정 보도를 부르짖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동안 면면히 이어져 오던 민주화의 흐름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루아침에 반민주화의 흐름으로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몇 십 년에 걸쳐 이루어온 민주화의 성과가 불과 5년이란 짧은 기간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이명박 정부는 '적절한 법적 절차'라는 말이 사전에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법률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고치기를 불사하는가 하면, 감사원이 뒤늦게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된 설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보수를 표방하고 나온 정부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덕목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는 꼼꼼하게 절차적 정의를 챙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바, 이 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하나의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출범 초부터 물의를 빚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은 원칙의 실종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이 정부의 인사는 누가 어떤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의종을 떠받들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고소영 인사'라는 말은 이 정권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쓰다 보니 위장전입, 부통산 투기,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등 갖가지 의혹이 대상이 된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임명되어 국민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못한 도덕성과 윤리성의 소유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린다니 누가 흔쾌히 그 권위를 인정하려 들겠는가?

이런 원칙 없는 인사가 나라에는 큰 해를 끼쳤지만, 정권 그 자체는 이를 통해 톡톡히 덕을 보았다. 검찰과 언론 같은 핵심 기관을 이런 방식의 인사로 장악해 5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로 전락해 아무 근거도 없는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에는 철저하게 재갈을 물려 4대강사업처럼 문제점투성이인 사업을 별 논의도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혹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파헤치는 반면, 자기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버리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 역시 정권으로서는 편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정부에 대해 두고두고 남을 명언 하나를 남겼다. 자신의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을 절반만이라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길이 남을 훌륭한 정부라고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은 진실을 손톱만큼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 후반부에 줄줄이 터져 나온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똑같은 우리말인데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대통령 자신 혹은 정권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정권의

도덕성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감싸고도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반추락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 어리석음은 정권 말 극심한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감행한 '셀프사면'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악용해 명백하게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측근 인사들을 사면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정권 자신도 그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선언한 셈이 아닐까?

다른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도 역시 과(過)와 더불어 공(功)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을 통해 공을 과대포장해 선전하는 한편 과는 한사코 감추려 드는 태도는 역겨움을 자아낼 뿐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4대강사업 관련 홍보인데, 심지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의 평가 결과가 나온 직후에 공주보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그 사업 덕분이라는 거짓 홍보를 마다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4대강사업 관련 거짓 홍보들이 모두 우리의 혈세를 들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어렵다.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마땅치 않을 터에, 정권의 수명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원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서는 만용을 과연 어떻게 봐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그래도 경제정책에서만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가 최근에 쓴 여러 글에서 밝혔듯,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도 결코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역주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부르짖다가 갑자기 상생을 부르짖는 변덕으로 시장에 일관되지 못한 시그널을 보낸 것도 중대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은 어느 쪽이 되었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편의에 따라 정책기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꿈으로써 시장기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라는 주장도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내가 얼마 전에 쓴 글에서 분명하게 보인 것처럼, 금융위기 직후 우리 경제가 보인 성과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비교할 때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네 나라 중 지난 4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데다가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걸 두고 정책의 성공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경제성장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5년의 기간 동안 질적인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일감 나눠주기, 혹은 중소기업 영역 침범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된 바가 전혀 없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척박하기 짝이 없는 경영 여건하에서 허덕이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이렇 할 진전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날이 더 팍팍해져 가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5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무슨 근거로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만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지 그 연유를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제 그 어둡고 긴 5년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터널 속으로 들어오는 새 날의 빛이 조금

씩 더 커져가고 있다. 며칠만 있으면 이 무거운 기분을 모두 떨쳐 버리고 새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물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우리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말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사라져 버린 원칙을 되찾아오고, 무너져 버린 사회 정의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유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를 통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우를 한사코 피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반면교사로서의 역할만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해줄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